

미래차 산단 그린벨트 해제 핵심부품 전초기지 육성

尹 '광주 민생토론회' 뭘 답았나

개발 불가능 제외 나머지 모두 해제
상무소각장, 복합문화커뮤니티 조성
광천권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의 미래를 인공지능과 미래차, 문화, 복합쇼핑몰 등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일 열린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첨단기술도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긍정적’, ‘과감하게’, ‘적극적’ 등 특유의 거침없는 언사를 통해 광주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청신호’

윤 대통령은 이날 첫번째로 광주 미래 먹거리인 AI와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의 전초기지로 삼고 올해부터 5년간 530억원을 투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한 완성차 기업과 70여개 소부장 기업이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우선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2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재·제어·통신 등 3대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단지 내에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도 새롭게 구축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AI 영재고 설립과 관련해선 “2027년 개교 목표로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하는데 국비와 지방비 분담 협의가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된 모양”이라며 “빨리 매듭 지어 국회에서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당(국민의힘)에도 애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빨리

빨리 (분담)협의를 마치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차 산업 선도 지역 육성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사업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차 국가산단 신속 조성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을 검토해 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추진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용지 내 96%가 그린벨트인 만큼 국가 전략사업에만 적용되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방에서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용지 내 그린벨트 가운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24%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조성

윤 대통령은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하면서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투입해 도자박물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